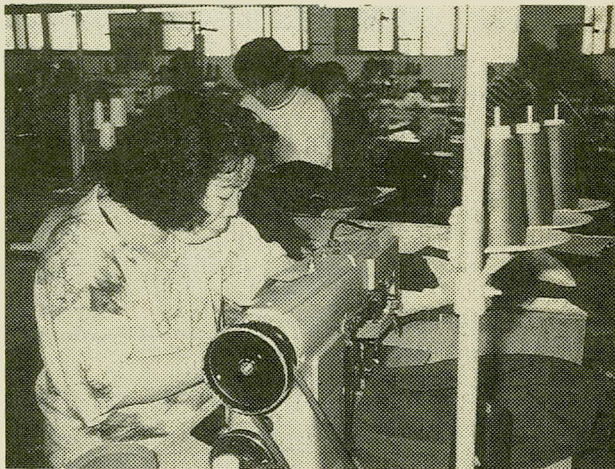


섬세하고 꼼꼼해 꾸준한 작업성과를 올리는 주부 근로자들이 미싱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가정주부 취업확대

경기도추진 "산업체 인력난 해소"

【수원=任具彬】가정주부 등을 산업체로 끌어들이며 인력공급 기능양성 생산성 제고 등 「1석3조를 꾀하는 여성취업확대계획이 경기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산업체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데다 이달 말로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이 끝나게 돼 가정주부 등 여성 유휴인력을 산업체에 취업케 함으로써 이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키로 했다. 도내 비경제활동 여성인

구를 1백만명으로 추산한 도는 여성들의 근로조건을 △취업근로(1일 8시간 근무) △단순근로 △가정에서 의 납품방식으로 계획하고 이들을 필요로 하는 취업시장조사를 이달중에 끝내기로 했다.

단독주택 주차장 확보

36坪에 1臺꼴 의무화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경우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1백20평방m(36.36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백30평방m(39.3평)에 1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이 나 공동주택 모두 1백50

정부 여성고용정책 '득보다 실'

근로자파견법·시간제 활성화등 성차별 심화 우려

93.12.2

노동부에서 국회에 낸 근로자파견법과 고용보험법안 및 시간제노동 활성화방안 등이 여성 고용상태를 현재보다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며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종로성당에서 '여성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여성 고용 불안정을 낳는 문제들을 짚어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화여대 조순경 교수(여성학)는 "남녀고용평등법 정착을 추진해야 할 정부가, 기업들이 이 법을 교묘히 피해 성차별을 굳혀버리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방조·묵인하고, 근로자파견법·고용보험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간제노동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여성차별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 이영순 대표도 "정부가 고용평등에 일정하게 비중을 두어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여성노

여성 단체 연합 '고용안정 토론'

동자들의 최대 파견인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정책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회에 상정된 근로자파견법 등 4개 고용관련법 제·개정안 가운데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단결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파견노동을 합법화하기 위한 근로자파견법안이 함께 올라간 것은 여성고용 안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저하 △고용불안정 심화 △결속력 약화 △파견업체의 중간착취 등의 문제점이 있는 파견업을 전면 금지하고 파견업에 속한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로 바꾸는 한편 공공직업안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시간제노동 활성화에 대해 조 교수는 "노동부의 시간제 고용 발상은 여성의 일차적 역할을 가사와 양육노동 담당자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간제 고용문제는 가사와 양육이 여성만의 고유한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최근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시간제 노동을 남비를 불문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노동자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고용형태로 보고 있다. 이미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포르투갈 등에서 시간제 고용을 부모중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양육휴가의 한 형태로 도입하는 추세다.

출산 이후 자녀가 일정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부모중 아무나 단축시간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줄어든 시간만큼 다른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일종의 일자리 나눠갖기의 기능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연숙 기자